

투데이 칼럼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늦춰서는 안돼

악 의적 오보를 한가지 예시 하겠다. 며칠 전 다수 언론이 "조국, 청와대 인근 ATM기로 5천만원 송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꼴이 되므로 다만, 이 때의 기사들에 대해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바란다.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기사는 모두 출처 표시가 없는 익명의 기사들이다. 보도의 생명은 신뢰다. 독자, 시청자들이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는 건 취재 단계에서 사실 여부를 성실하게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보도의 원칙이다.

자료를 입수하였다면 누구로부터 입수하였는지 출처를 밝혀야 하고, 누구의 주장이고 발언이고 누가 폭로했는지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 신분이 노출되면 제보자나 취재원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익명으로 보도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익명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기사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언론사의 윤리규범은 '사실 확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취재원의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언론사의 윤리규범은 '취재원 명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익명으로 보도할 경우, 익명의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 동기

와 익명을 요청하는 사유, 취재원을 신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기사 안에 상술해야 한다. 언론사의 기사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다. 출처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 법조계에 따르면'이 전부다. 언론사는 윤리규범을 충실히 준수하였을까? 윤리규범을 준수하였다면 쓸 수 없는 기사다.

언론사 기사는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모호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기사에 대해 흘리지도 않았고 확인해준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 저 기사들은 어디서 온 거란 말인가. '업계 등에 따르면'이라는 언론사 기사는 출처가 더 모호하다. 업계라니, 대체 어떤 업계

를 말합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나은 편이다. 이에 출처가 없는 기사도 있으니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나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기사나 거기가 거기다. 아니, 애매하게 출처를 표시한 '면회성 기사'가 더 비겁하고 더 알럽다. 게다가 기사의 문장은 온통 '알려졌다', '전해졌다' 투성이다. 차라리 기사에 '우리는 음해, 비방, 일방적 주장, 유언비어를 확인 없이 그대로 중계합니다'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편이 아니다. ATM기로는 하루에 5천만원을 송금할 수 없다. 아무 은행에 전화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기사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으로 확인되면 기사를 쓸 수 없으니가 오히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실 확인은 기자의 윤리이고 의무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징벌적 배상, 어렵지 않다. 보도 이전의 취재 단계에서 사실 확인과

검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하였는가, 준수 의무를 회피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인가 등등을 따져보면 된다. 오보에 대해서는 기사를 쓴 기자와 소속 언론사가 오보가 아님을, 취재원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오보에는 당연히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

윤리규범은 언론사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언론사에 다 있고, 없으면 기자협회나 신문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용한다. 취재윤리는 만국공통이고, 기자들에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과도 같다. 윤리규범을 준수하였는가, 그것만으로도 오보의 책임을 따질 수도 있다.

목숨을 뺏는 것만이 살인인 아니다. 오보에 의한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오죽하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죽은 목숨이라 하겠는가. 언론의 오보에는 기동부리가 흔들릴 정도의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악의적인 오보는 특히 그렇다. 그대야 예방 효과가 있다. 법원도 사립의 명예값을 '인간의 존엄'을 실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를 바란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전해졌다', '알려졌다'를 남발하는 기사들이 넘쳐난다. 그런 기사들은 독자, 시청자들을 기망하는 가짜뉴스로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은 중요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사회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사회악이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사설

기초 생활보장제 적극 시행해야

군산시가 부양 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 급여에서 탈락한 중위 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적극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 생계 유지비 41만5210원(4인 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실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 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 기초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 생활 보장 제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된 실거주자이다. 소득은 가구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 소득 30% 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 원 이하인 세대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군산시는 우선 1차적으로 국민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한 1267구에 대해 점수 조사를 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위기 가구 발굴에 나선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직권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개별 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구제해야 마땅하다.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 생계 급여에서 탈락한 중위 소득 30% 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를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 반납 연령 낮춰야

운전면허 반납 연령을 65세로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요즘 갈수록 고령자 운전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주시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전주시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나이를 65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운전 면허증을 가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이들 고령 운전자들은 주행 중 갑작스런 변화에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얼마 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풀장에 80대 노인이 물놀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원생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4년 71명, 2015년 79명, 2016년 68명, 2017년 83명, 2018년 75명 등 총 376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사망자 중 25%가량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라북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 전수는 2015년 2만 3063건에서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북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0만1814명으로 이중 운전 면허 가진 반납자 수는 288명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운전 면허 반납 연령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난민촌 사람들에게 춤 가르치는 팔레스타인 댄서



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난민캠프에서 팔레스타인 댄서 아흐메드 알 가리즈가 댄스 강습을 하고 있다.

'어도비 맥스 2019' 참석한 크리에이터들



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 컨벤션센터에서 '어도비 맥스 2019'가 열려 참석자들이 태블릿을 이용해 자신들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featuring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hip on waves and a sun. Text includes: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